

## 정직처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40, 2022. 5. 3.]

### 【전문】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구합64587 판결

#### 【변론종결】

2018. 11. 14.

#### 【판결선고】

2019.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2행의 '2015. 12. 26.'을 '2015. 11. 26.'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행의 '첨보보고서'를 '첨보보고서'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6행의 '제59호증' 뒤에 '을 제65호증'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8행의 '21호증' 뒤에 '제66호증'을 추가한다.
- 제10쪽 제1행의 '제3호'를 '제2호'로 고쳐 쓴다.
- 제16쪽 관계법령의 제9항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2. 추가 판단

원고는,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와 같이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CCTV 영상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흥경찰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2015. 9. 1. 이후 시행)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주차장 내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근무태만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청문감사 담당자가 원고의 근무태만을 인정할 만한 첩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태만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 외의 사용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시흥경찰서 B과출소가 위 청문감사 담당자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